

사회복지 주간 동향(23.12.11.~12.15.)

1. 용인시 정책 동향

1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동백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10가구에
맞춤형 물품 지원**



*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3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근배)가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의 일환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10가구에 맞춤형 물품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힘

- 협의체는 지난 4월부터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에 매월 건강 음료나 영양식 등을 제공하고 협의체 위원들과 대상 가구를 2:1로 연계해 말벗 서비스를 제공. 이를 통해 대상 가구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파악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 협의체는 이들의 주거환경이나 불편한 점을 살펴 가구별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지원, 이동이 불편한 가구에는 지팡이와 링거대를 지원하고 화장실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하는가 하면 난방 취약 가구에는 전기장판과 가슴기 등을 지원
- 박근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이번에 지원한 물품이 우리 이웃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동백3동 맞춤형복지팀)

2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역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국전기안전공사 용인지사와 저소득 가정 전기공사 지원



- * 용인특례시 처인구 역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8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용인지사와 지역 내 저소득가정의 전기 안전을 점검하고 콘센트와 조명등을 교체하는 공사를 지원했다고 밝힘
 - 한국전기안전공사 용인지사 직원 6명은 한부모가구와 홀로어르신 가구 등 2곳을 사전 점검하고, 대상 가구를 방문해 누전차단기를 교체하고 노후한 백열등과 콘센트 등도 모두 교체
 - 한국전기안전공사 용인지사는 역북동과 협약을 맺고 매년 상·하반기 취약 계층을 방문해 누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하고 노후 형광등이나 콘센트를 갈아주고 있음
 - 앞선 상반기에도 지역 내 취약계층 13가구에 전기 안전 점검과 조명 교체 등을 지원,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54가구가 지원 받음
 - 목인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상 가구를 발굴해 누전 및 화재 사고 예방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역북동 맞춤형복지팀)

3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상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아동 위한 원어민 영어 수업 인기



- *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노석환)가 취약계층 아동을 영어 학습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원어민 영어 수업이 참여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30일 밝힘
 - 협의체는 저소득 가정이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30명의 어린이가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히도록 지난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무료 수업을 지원하고 있음
 - 강사와 장소 등 전반적인 수업은 지역에 소재한 대안학교 다나에스아이와 어린이교구교재전문기업인 다나플레이에서 후원
 - 어린이들은 매월 한 차례 원어민 강사가 진행하는 수업에서 축구나 배드민턴 등 체육과 음악, 미술, 과학 등 다양한 주제별 활동을 하며 영어를 배움
 - 지난 25일 열린 수업에는 이탈리아 동화작가이자 예술교육 전문가인 주세페 비탈레 작가가 강사로 나서 23명의 어린이에게 ‘수 많은 언어’라는 주제의 창의 예술 특강을 진행

- 수업에서 어린이들은 서툰 솜씨로 영어 단어를 이어 붙이고 말풍선도 그려 넣으며 손수 영어 동화책을 만들었음, 주세페 작가는 동화책 ‘개성있는 네명의 예술가’ 등 저서를 직접 들려주며 어린이들에게 “좋아하는 일을 찾아 열정을 다하되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함
- 협의체 관계자는 “영어에 관심이 있어도 어려운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화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진행될 수업에서도 어린이들이 영어를 친근하게 느끼도록 유익한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상하동 맞춤형복지팀)

4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용인특례시, 어려운 이웃 돕는 나눔 손길 잇따라



-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3일 밝힘
 - 지난 1일 대한한돈협회 용인시지부(지부장 백승조)가 처인구 백암면을 찾아와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100만원과 한돈 170kg를 기탁
 - 대한한돈협회 용인시지부는 지역 축산 경영인 70여명이 한돈을 알리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 매년 연말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다양한 기탁을 이어오고 있음
 - 백 지부장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이 장학금과 돼지고기로 위안을 얻길 바란다”고 말함
 - 이날 포곡읍농촌지도자회(회장 이창구)도 포곡읍에 회원들이 공동경작지에서 직접 재배한 백미 10kg짜리 50포를 기탁
 -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쌀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음
 - 같은 날 기흥구 서농동에선 영통영락교회(담임목사 고요셉)가 4kg짜리 백미 200포와 라면(20개입) 50박스 등 33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
 - 수지구 풍덕천2동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소득 어르신의 인지 향상을 위해 컬러링북과 기억 노트, 퍼즐, 색연필 등 8개 종류의 교구를 전달
 - 지난달 30일에는 기흥구 구성동 소재 푸른유치원(원장 한나연) 원생들이 동을 방문해 바자회 성금으로 마련한 성금 50만원과 라면 5박스를 기탁

- 지난달 29일엔 한국국토정보공사 용인서부지사(지사장 김규태)가 수지구를 찾아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80만원을 기탁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해 기흥구에 성금을 기탁한 데 이어 올해 경기지역 화폐 사용 촉진 캠페인, 1인 1기부 계좌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음
 - 같은 날 처인구 남사읍에선 남사오이협의회가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돕는 데 써달라며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300만원을 기탁
 - 어려운 이웃의 끼니를 걱정하며 밑반찬 지원 손길도 이어짐
 - 기흥구 상하동에선 지난달 29일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담근 김장김치 130포기를 취약계층 88가구에 전달
 - 지난달 27일 기흥구기독교연합회는 33개 교회서 모은 성금으로 마련한 김치 (5kg) 202박스를 전달
 - 이날 기흥구 신갈동에선 신갈청년회가 경기도 김장 지원 공모사업에 당선돼 확보한 예산으로 직접 담근 김장김치 110상자를 기탁
 - 같은날 처인구 원삼면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소득 홀로 어르신 10여 가구를 방문해 겨울 이불과 핫팩 등 겨울용품을 전달
-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백암면/남사읍/원삼면/상하동/서농동/구성동/신갈동/풍덕천2동 맞춤형복지팀, 기흥구/수지구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인력육성팀)

5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동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 * 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은 지난 5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대식)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찾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6일 밝힘
 - 10여 명의 협의체 위원들은 편의점이나 의원, 약국, 부동산 등을 돌며 주변에 생계난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함
 - 이 위원장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 어려워진 이웃들이 이웃의 따뜻한 온정으로 일어서도록 돕기 위해 캠페인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발굴하는 데 세심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동천동 맞춤형복지팀)

2. 중앙정부 정책 동향

1 중앙정부 복지현안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위기정보 입수 39종→44종 확대
약 16만 명 규모로 진행 예정



- * 보건복지부는 11월 20일(월)부터 내년 1월 12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2023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밝힘
 -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
 -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은 2회차(’23.11~1월, ’24.1~3월)에 걸쳐 약 30만 명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6차 중앙발굴 대상은 약 16만 명 규모, 특히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2023.11.22.)에 따라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 발굴할 계획
 - 위기정보로 입수된 총 700만 명의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여 자체 발굴에 활용
 - 이번 발굴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 정보가 추가로 활용
 - 이에 따라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가구가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와 주거취약 가구를 발굴대상에 포함할 계획(전·월세 등의 일정 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등)
- * 이번 발굴부터는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가 제공, 당사자가 전입신고 시 신청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가 지자체에 제공되어 기존에 동·호수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위기가구를 더욱 원활하게 찾아낼 것으로 기대
 - 향후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

- 전입신고 시 기재한 연락처도 제공, 통신사가 보유한 이동전화 연락처의 경우 연내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여 6차 발굴기간 중 연락이 안되는 대상에 대해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제공할 예정
- 또한 이번 발굴부터 지자체에서 최신정보를 원하는 주요 체납정보의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제공한다. 지자체에서 최신정보를 활용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건보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금융연체, 통신비 체납, 단전, 전기료 체납)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2 중앙정부 복지현안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 실태 등 공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높인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28.) >

- * 보건복지부는 11월28일(화)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 지난 6월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검·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
 -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장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노인 관련 기관의 운영·취업·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을 할 수 없도록 선고하는 제도(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점검·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후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등이 포함된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함
 - 또한,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이를 공개(안제20조10 제1항 신설)
 - 아울러,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검·확인 결과 공개는 시행령 시행 이후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등 위반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안 부칙제2조 신설)

※ 보도자료 참조(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3 중앙정부 복지현안

1인 가구 빈곤율, 전체 가구 대비 17.8%p 높아

<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개최 >

- *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화) 오전 10시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소재)에서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개최
 - 이번 전문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내·외부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입수정보의 포괄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에 대해 사회보장통계 및 행정데이터 전문가 그룹의 논의가 이뤄짐
-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사회보장기본법」개정('21.12월 시행)으로 부처별·제도별 분산되어있는 개인단위 자료를 연계한 통합데이터로써 '22년 1기 구축(2020년자료)을 시작하여 분석활용 1년 차에 접어들고 있음
 -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표본(약 1,000만 명)을 추출하고 33개 자료 제공기관('23년 기준)의 행정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개인단위로 결합한 통합데이터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대상 및 정보의 포괄성이 확보됨에 따라 이날 발표된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분석'에서는 ▲전체 가구와 1인 가구의 비교, ▲1인 가구 내 특성별 사회·경제적 환경, ▲사회보장 수급 실태 등 세부 항목별로 분석 가능
 - 1인 가구는 전체가구 대비 연평균 시장소득(가구균등화)이 약 1천만 원 가량 낮았으며, 자산수준이 가장 낮은 자산1분위에 1인 가구의 40% 이상이 분포하여 소득과 자산 모두 전체 가구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1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률(1인 6.5%)은 전체 가구(3.2%)보다 2배가량 높았으며, 노인의 경우 수급률이 높으나 수급액은 오히려 청년이 높게 나타남
 -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률) 청년 0.9%, 중장년 6.9%, 노인 14.2%
 - (1인가구 생계급여 평균수급액) 청년 61.6만 원, 중장년 51.5만 원, 노인 24.5만 원
 - 또한 1인 가구의 빈곤율(중위50%미만, 가처분소득)은 47.8%로 전체 가구(30%)보다 17.8%p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인 가구 내 노인 빈곤율은 70% 이상으로 심각하나 국가 개입을 통한 빈곤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빈곤 감소효과 : (1인 청년) 1.7%p, (1인 중장년) 5.1%p, (1인 노인) 18.6%p

붙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보는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

[분석자료]

- ▷ 11개 부처, 29개 기관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결합
- ▷ (표본) 2020년 기준 전국민의 약 20% 구성 (약450만가구, 약1000만명)
 - 가중치 적용하여 전국민 상황으로 분석

① 인구학적 특성

- (가구특성)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31.8%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1인가구 31.8%, 2인가구 28.0%, 3인가구 20.1%, 4인가구 15.6%, 5인이상 가구 4.5%
- (연령·성별 비율) 1인 가구 내에서 청장년층은 남성, 노인은 여성 비율 높음

연령대	전체	남	여
20대 이하	20.1	20.3	19.9
30~39세	16.9	21.6	12.0
40~49세	13.8	17.7	9.9
50~59세	15.8	18.3	13.2
60~69세	15.6	13.7	17.5
70~79세	10.9	5.9	16.0
80세 이상	7.0	2.6	11.6
합계	100	100	100

② 경제학적 특성

- (소득수준) 전체가구(2,873만 원) 대비 1인 가구(1,860만 원)의 연평균 시장소득(가구균등화)은 약 1천만 원 가량 낮았으며, 1인 가구 내에서 청년의 시장소득이 가장 높은 편
 - 연평균 시장소득 : (1인 청년) 2,433만 원, (1인 중장년) 2,241만 원 (1인 노인) 436만 원
- (자산수준) 1인 가구는 소득보다 자산의 1분위 분포가 높으며 (소득1분위 18.6%, 자산 1분위 43.6%), 자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가구주 평균 연령도 높아지는 경향
 - 자산분위별 평균연령 : (1분위) 45.2세, (10분위) 57.7세

③ 사회보장 종합분석

- (국민기초생활)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률 2배 이상 高 (전체 3.2%, 1인 6.5%)

- 1인 가구 내 노인의 생계급여 수급률이 높으나, 수급액은 오히려 청년이 높음
- (생계급여 수급률) 청년 0.9%, 중장년 6.9%, 노인 14.2%
- (생계급여 평균수급액) 청년 61.6만 원, 중장년 51.5만 원, 노인 24.5만 원
- (기초연금) 전체 노인에 비해 1인 가구 노인의 수급률, 수급액 높으며, 특히 1인 가구 내에서도 여성(79.9%), 농어촌(85.2%) 수급률 높게 나타남
- (수급률) 전체 66.4%, 1인 가구 77.6%, (수급액) 전체 25.2만 원, 1인 가구 28.2만 원
- (국민연금) 1인 가구의 국민연금 가입률 높음(전체 42.0%, 1인 48.7%)
- 1인 청년은 사업장 가입, 중장년은 지역가입자 비율 높게 나타남(전체가구 比)
- 노령연금 수급률 유사, 수급액이 적음, 특히 1인 여성(남44.4만 원, 여 26.9만 원), 75세 이상(65-75세 36만 원, 76세이상 19만 원) 연금 수준 저조
- (빈곤율) 전체가구 대비 1인 가구 빈곤율 약17%p 높음(전체 30%, 1인 47.8%)
- 1인 가구의 노인, 농어촌 빈곤율은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국가 개입으로 인한 빈곤 감소 효과도 가장 크게 나타났음(1인 노인 18.6%p 감소)

[1인가구 특성별 빈곤율 (중위50%기준, %)]

기준	인구집단			지역			합계
	청년	중장년	노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시장소득	38.6	48.5	88.9	52.6	56.4	67.5	55.0
가처분소득	36.9	43.4	70.3	46.3	48.5	55.9	47.8
빈곤감소	1.7	5.1	18.6	6.3	7.9	11.6	7.2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소득은 사적이전소득이 제외되어 통계청 발표보다 빈곤율 수치가 다소 높음

※ 보도자료 참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평가과)

4 중앙정부 복지현안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청사진 마련, 국민 의견을 듣는다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4~’28),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4~’28) 공청회 개최 >

- *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수) 오후 13시 30분 서울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4~’28)」,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4~’28)」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이번 공청회는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향후 5년간 사회보장 비전을 토대로 수립된 사회보장 정책의 추진전략과 주요 과제(안)에 대한 전문가, 시민사회,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됨, 특히 사회보장의 주요 영역인 사회서비스 분야의 5개년 기본계획(안)도 같이 논의

[기본계획의 근거법령 및 관계]

계획(명)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근거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위상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

- 두 기본계획(안) 마련에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보장 정책 비전인 「정부 복지국가 전략」과 함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장애인·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사회보장 분야 정책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참여한 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정책 비전으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재정 혁신을 제시
 - 이번에 마련된 두 기본계획(안)은 위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향후 5년간 범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세부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정부의 사회서비스 발전·지원을 위한 종합 청사진으로써 최초로 수립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비전과 전략
 - 정부는 이번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와 수차례에 걸친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 회의 등을 거쳐 추진과제를 발굴·논의하였으며, 관계부처 회의와 사회보장위원회 기획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과제 세부 내용을 검토

- * 기본계획(안)은 지난 5월 발표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사회보장 비전을 통해 국민의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으로 전략 범위 확장
 - 첫 번째 전략인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는 누구도 사회보장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그간 개인적 어려움으로 여겨졌던 ‘고립’을 사회적 위험으로 포함하여 고립된 사각지대의 복합적 어려움까지 폭넓게 지원하고자 함
 - 두 번째 전략인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다양한 복지 욕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양질의 서비스 이용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공급기반 확대와 품질관리 강화,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생태계의 선순환 지원
 - 세 번째 전략인 ‘사회보장체계 혁신’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고령화의 영향을 직접 받는 사회보험의 구조 개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노령·질병 등 생애주기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AI·빅데이터 등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재활 등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신청주의에 기반한 행정체계도 국민이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감, 복잡·다양한 사회보장제도도 간결하게 재편해 나감
 - 이러한 전략과 주요 과제를 바탕으로 각 부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하여 향후 5년간 이행해나감, 매년 사회보장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시 성과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점검해나갈 예정
- *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 비전과 전략
 -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번째 기본계획이자 사회서비스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큼, 그간 사회서비스 관련 계획은 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수립되었으나, 이번에는 사회적 일자리 외에도 사회복지서비스와 고용,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
- * 기본계획(안)은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담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3대 분야의 10대 추진과제를 제시함
 - 첫 번째 분야인 “보편적 사회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신수요 대응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중산층 이상 계층까지 확대하며,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복합적 수요 대응을 위한 융합서비스 확충을 추진할 계획
 - 두 번째 분야인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규제 합리화를 통해 건전한 경쟁 기반 조성, 양질의 공급자 성장 지원, 품질관리 강화를 추진해 나감

- 세 번째 분야인 “공급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복지기술 고도화 및 통계·법 체계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 아울러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 분담과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 진흥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 각 지자체는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며, 향후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른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 과제별 추진현황과 실적을 분석하여 정책 환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

* 공청회 개최 개요

- 이번 공청회는 1부 기본계획 발제와 2부 토론으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연구책임자인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선영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이 각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
- 2부 토론은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전문가 4명의 지정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청중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
- 토론자: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노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 보도자료 참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5 증양정부 복지현안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시행

< 개정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2월 1일 시행 >

<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 연장 >

< 2024년 기초수급자 2만 8천여 명 경제적 부담 완화 >

-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2월부터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힘
 -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제10차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22.12.30.), 시행('23.12.1.))
 - 주요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는 것
 -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음
 -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
 -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비고착, 1단계)는 연장대상에서 제외
- < '근로능력 없음' 유효기간 개선 주요 내용 >

호전 가능성	의학적 평가 결과(단계)	유효기간		
		현행	개선	
고착	1	2년	3년	1년 연장
	2 ~ 4	3년	5년	2년 연장
비고착	2 ~ 4	2년	4년	2년 연장

< 사례로 보는 고시 시행 후 달라지는 점 >

- * (사례1)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2020년 12월 근로능력평가를 처음 신청하여 '근로능력 없음'(고착, 1단계)을 통보받았고, 2년 후 두 번째 평가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옴
 - A씨의 2024년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고착, 1단계)이면 평가 주기가 기존 2년에서 1년 연장되어 3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됨
- * (사례2) 기초생활수급자 B씨는 2020년 12월 첫 번째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비고착, 1단계)을 받았으나, 건강상태 악화로 1년 후 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고착, 2단계)을 통보받음
 - 2024년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고착, 2단계)이면 B씨는 기존 3년에서 2년 연장된 5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됨
- 이번 고시 시행으로 2024년 기초수급자 약 2만 8천 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되어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됨

※ 보도자료 참조(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

6 중앙정부 복지현안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가구)13.16% 인상

- 2024년 생계지원금 인상을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12월 6일(수)부터 12월 18일(월)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
-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

(단위:원/월)

가구구성 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2024년안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
-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10월~다음 연도 3월) 지원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현행 (‘23년 기준)	고시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지침 (생활준비금)	2,077,000	3,456,000	4,343,000	5,400,000	6,330,000	7,227,000
개정안 (‘24년 기준안)	고시 (생활준비금 포함)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

※ 보도자료 참조(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7 중앙정부 복지현안

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 3단계 관리로 대전환

< '100만 심리상담'부터 '고용·주거 지원'까지 전방위 대응 추진 >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주요 내용 】

- ◇ 비전: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
- ◇ 목표: '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 ◇ 예방 강화: 격년마다 정신건강 검진,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 ◇ 정신응급 입원병상 확보, 자·타해 위험 있으면 집중 사례관리
- ◇ 전국 어디서나 정신재활 서비스 제공, 주거·고용 지원 확대
- ◇ 매년 학생, 국민 1600만 명 자살예방교육, 대국민 캠페인 강화
- ◇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 설치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기본방향

비전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 예방부터 회복까지 -
핵심 목표	■ '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4대 전략 및 핵심과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 국민 100만명에 전문 심리상담 지원 ■ 청년·학생 검진 주기 단축 및 조기개입 ■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 및 EAP 활성화 ■ 상담전화 109 통합 등 자살 예방 강화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 정신응급대응 강화 ■ 입원제도개선, 추가인상 등 의료질 향상 ■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 ■ 마약치료기관 확충·운영 활성화	
정신건강 서비스이용률	('21) 12.1% → ('30) 24% (2배 증)	정신의료기관 평균 재원기간	('21) 186.6일 → ('30) 90일 이내 (50% 감)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 모든 지자체에서 정신재활서비스 제공 ■ 일상회복을 위한 고용·주거 지원 ■ 보험차별 해소 등 권리보호 지원 강화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 정신질환 편견해소 대국민 캠페인 ■ 자살예방교육(의무) 1,600만 명 실시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설치·운영	
정신장애인 고용률	('21) 10.9% → ('30) 30% ('22. 발달장애인 고용 수준)	“정신질환자 위험” 인식	('21) 59.6% → ('30) 30%(50% 감)

* 4대 전략과 주요 과제

1.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 ① (국민 마음투자) '24년 8만 명, 임기 내 100만 명에 심리상담 제공
 - '24. 중·고위험군 8만 명(1인당 60분 8회) → '27. 50만 명으로 단계적 확대
 -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
- ② (정신건강 자가진단·관리 활성화)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하여,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
- ③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1600만 명을 대상으로 마음 이해 및 도움요청·제공
 - 방법 등 자살예방 교육 실시('24.7.~) 학생, 직장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는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는 생명지킴이 교육 실시
 - 【인식개선교육】생명의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 방법 등
 - 【생명지킴이교육】자살위험요인·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
- ④ (긴급전화 및 SNS상담 도입) 자살예방 상담에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긴급전화 109 번호를 부여하고, SNS상담을 도입
 - 전화응대를 개선을 위해 상담원을 충원('23년 80명 → '24년 100명)하고,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SNS(문자, 메신저 등) 상담을 도입

1-2. 청년의 정신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원

- ① (정신건강검진 확대) 청년층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확대(우울증 → 우울증, 조현병·조울증 등)하고, ▶검진주기를 단축(10년 → 2년)

[참고 : 현행 제도 및 개선(안) 비교]

구분	현 행	개선(안)
대상	20~70세 성인	청년층(20~34세) 대상 우선 확대
검사질환	우울증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등
검진주기	10년	2년
사후관리	부족	정신건강복지센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 ② (대학 내 지원 강화) 대학 내 상담센터를 통한 학생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심리 지원 노력 및 성과를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교육부)
- ③ (직장인 마음건강 관리지원)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과 고위험군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고용부)
 - 근로자 건강센터(50인 미만 대상, 23개 센터 및 22개 분소) 및 근로복지넷(300인 미만 대상) 통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
 - 기업 전반의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기업 포상, 우수사례 확산 등 인식개선을 추진

-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확대
 - ('23년) 14개소 → ('24년) 23개소 확대 추진(+9개소)
- ④ (실직·구직자 지원)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구직자 대상 진로,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지속 제공(고용부)
 - 상담심리 또는 EAP 전문자격증 보유자가 1~3명 상주, 1인당 최대 6회 지원

2. 중증 정신질환은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① (응급입원 대응 강화)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확대
 -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경찰청·복지부)
 - 위기개입팀 확충('23. 204명→ '24. 306명)
 - 현재 서울(1), 경기(2) 설치 중
 -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25년 전국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 확보 및 정보공유를 추진
 - 정신응급병상 : ('23) 139병상 → 시군구당 최소 1병상 확보 추진
- ② (의료 질 향상)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
 -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인상('24.1월~), 치료 수가 신설 보상 등을 통해 인력투입 및 치료환경을 개선
 - 상급종합병원 수가 95% 인상((집중관리료 23,670원 → 47,030원, 격리보호료 59,520원 → 118,260원)
 - (예시)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개선, 치료 수가(작업 및 오락요법) 급여기준 개선 등
 -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관련 사회적 논의 시작
- ③ (지속치료 유지) 퇴원 후 치료유지를 위한 시범수가의 정규수가화,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 완화
 -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 연계 관리 등 수가 지원) 및 낮병동 지원조건 다양화(6시간 이상 이용 시만 적용 → 6시간 미만 수가 신설)
 -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은 5%이나, 비교적 고가로 의료급여 환자는 이용에 소극적
- ④ (위험환자 치료중단 방지) 자·타해 위험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함
 -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 환자 외래치료지원 결정, 불응 시 평가 후 입원 조치
 - 특히, 자·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환자는 필요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연계(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치료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계획
 - 현행법상 가능(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하나 미활용

3. 중증 정신질환자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체계 마련

- ① (복지서비스 확대)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서비스를 개발·확충
 -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
 - WHO 권고(동료지원센터, 지원주택 등)서비스 사업모델 개발
 - 최초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및 가족 실태조사’(’23.10.~’24.3.) 결과를 활용하여 기획
- ② (정신요양시설 개편)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 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함
 - 또한 입소자 전원에 대한 실태조사(8천 명, ’24년~) 후 필요시 적합한 시설 (노인/장애인/정신재활시설)로 재배치
- ③ (고용·주거 지원)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도 개발하여 지원(고용부·복지부)
 - 취약계층 중증 정신질환자는 전문가·부처의견 통해 범주화(고용부, 복지부)
 -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공모(’23년, 16개 지자체 장애인 임대주택 380호)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국토부·복지부)
- ④ (권리보호 강화)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및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
 - 보험가입 차별 점검 및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금융위하고, 자격취득 제한(말조련사 등 50종 이상 자격취득 제한 중) 규제 완화 추진
 -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PAD: Psychiatric Advance Directives) 도입을 검토하고, 공공후견 범위를 확대(정신요양원입소자 → 지역사회 거주자)
 - 정신응급 발생 시 환자의 의사결정 대리인, 희망 치료기관·주치의 등을 사전에 지정

4.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정책 추진기반 마련

- ① (인식개선)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
 - 대학동아리, 정신질환자 당사자 홍보대사 등을 활용하여,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라는 편견을 해소
 - 언론계와 연계하여, ‘언론보도 권고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으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보도 최소화
- ② (정책추진체계 정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 정책추진체계를 정비
 - 향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장기·복합과제를 논의하고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

- 논의과제(안) : 정신질환자 고용·주거지원 방안, 응급이송체계 구축방안, 사회복귀 로드맵 등
 - ▶정신재활시설 설치 현황,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반영한 가칭지역 정신건강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추진
 - ③ (인력 확충)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 및 처우개선 추진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전수조사」 결과(~12월)를 바탕으로 근무 및 수련 여건 개선 추진
 - ('23) 19.4천 명 → ('27) 22.8천 명(+3.4천 명)까지 단계적 양성 추진
 - 전문성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장기 근속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처우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
 -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 : ('23) 25명 → ('25) 22명 목표
 - 인건비 단가 : ('24) 38.4백만 원 이후 단계적 인상 추진
-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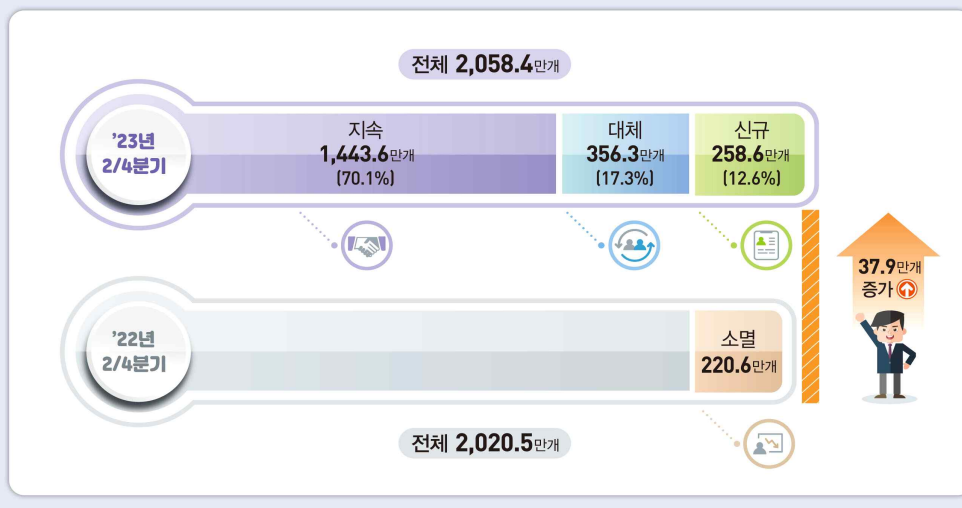
3. 통계로 보는 복지

1 중앙 통계현안

2023년 2/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23년 2/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형태별 분포



※ 자료 : 통계청 자료(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